

버마 민중에게 승리를!

학살을 중단하라



특집: 버마 민중항쟁



- 민중항쟁의 전개와 전망
- 인터뷰 :
마웅저 버마인 활동가
- 버마 저항 운동의 교훈

6~9면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3, 10면

노무현 측근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

4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대선

5면

파병 연장 시도 중단하라

16면

이집트 노동자 파업의 승리

11면

존 몰리뉴 칼럼 - 사회주의와 노동조합

12면

노동자 투쟁 소식

- 뉴코아 · 이랜드 / KTX / 코스콤

14~15면

평화는 이라크에도 필요하다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이라크 점령 종식!

10·27 한미공동반전행동

일시: 10월 27일(토) 오후 4시 / 장소: 서울역(광화문까지 행진) /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www.counterfire.or.kr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혼란 일보 직전의 파키스탄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무사라프 독재
정부의 위기가 아래로부터 투쟁이 폭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는 점을 크리스 하먼이 설명한다.

영화평 - <즐거운 인생>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이라크 전쟁이 대부분 석유와 관계된 것이라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게 슬펐다.”

— 전 FRB 의장 앨런 그리스펀

“화폐어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재벌 거물들을 위한 운송수단처럼 보인다.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화폐어를 탄다.” — 〈파이낸셜 타임스〉

이명박: “[‘마사지걸’ 발언은] 45년 전 우리 선배 이야기를 전한 것”
민주당 대변인: “20대 학창시절부터 그 선배가 전한 ‘마사지걸 고르는 방법’을 ‘인생의 지혜’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이냐.”

손학규: “총리 시절에 이해찬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구상에 동조했다. 아직도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나.”

이해찬: “그 당시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 손학규 후보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 난형난제

“[대량해고와 외주화는] 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법을 지키는 기업을 악덕기업으로 몰고 있다.” — 경총 경제사회본부장 이호성의 불만

손석춘: “[유한킴벌리 모델을 받아 들였다는 포스코에서]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맞아 죽은 일이 일어났다.”
문국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은 아니다.” — 문국현의 ‘사람 경제’?

“아들 일기를 보니 '마친 경찰, 잡으라는 도둑놈은 안 잡고 죄 없는 우리 아빠를 잡아갔다. 경찰이 사장을 돈 가져주려고 별 짓을 다한다'고 썼더라.” — 추석 때 연행됐다가 나온 장석주 이랜드일본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인터넷까지 검열 · 사찰하는 반민주 정부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북한 관련 게시물 1천6백여 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 명령을 내렸다.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삭제 최종 시한이 지났지만 민주노동당 등 10개 단체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찰과 검열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삭제를 거부했다. 당장 정보통신부는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7월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다. 개악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판 국가보안법이라 할 만한 희대의 악법이다.

정보통신부는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북한이나 불순세력의 선전 · 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만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노무현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남북 정상회담’ 시대에 이것은 황당한 이중잣대다. 삭제 대상 게시물 중에는 〈연합뉴스〉에도 실린 글까지 있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같은 우익들은 “사이버 공간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방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동아일보〉도 “국가정보원 · 검찰 · 경찰은 정통부의 형사고발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며 탄압을 확대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이중잣대

청와대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부 북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시사했지만, 곧바로 “민심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친북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게다가 “청와

대와 정통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아예 탄압의 ‘몸통’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금은 ‘친북’ 게시물을 문제 삼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게시물을 문제삼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이 벌금을 줄여보자는 실용주의적 판단으로 게시물 삭제를 결정한 것은 아쉽다. 다행히 부당한 검열에 맞선 싸움은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적 후퇴가 결집된 항의 효과를 반감시킬까 봐 걱정이다. 저들이 자신감을 얻어 더 수월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경찰이 추가로 5백25개 게시물의 삭제를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정부는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단체들을 방어하며, 게시물 삭제 명령 철회와 인터넷 사찰 · 검열 중단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송주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

성매매로 내몰면서 단속하는 위선적 정부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났다. 노무현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일어났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강화된 단속으로 집결 지역 성매매업소 수는 감소한 듯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사실, 단속 강화는 성매매가 행해지는 지역을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고 성매매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도록 할 뿐이다. 마사지 업소, 휴게텔,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적 성매매가 성행중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성매매가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많다.

단속 대상

경찰청은 “성매매여성성을 단속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9월 1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고 주장하지만, 성매매여성성은 여전히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지난 3년 8개월 간 경찰 단속에서 검거된 성매매여성성은 총 1만 3천3백12명이었는데, 그 중 겨우 2천 명 가량만이 처벌을 면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위계 · 위력에 의한 강요’, ‘마약 중독’, ‘심신 미약 · 장애’, ‘인신매매’ 같은 조건에서 성을 판매한 여성만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한다.

경찰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성판매를 그만두지 않는 현실을 단순히 그들의 자활의지 부족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받는 생계지원금은 매월 44만 원에 불과하다. ‘자활의지가 검증된’ 여성들은 1인당 3천만 원 이내의 창업자금을 지원(1년 거치 3년 상환조건)받을 수 있을 뿐이다.

성매매여성의 대부분은 가난 때문에 성을 판매한다.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혐오하면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가난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뉴코아 · 이랜드 파업 강경 탄압에서 보여 줬듯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구조를 온존시키려 한다. 성매매 단속 강화를 약속하는 정부의 위선에 진보진영이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진희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려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적립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구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대표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기업주들이 추천권의 과반을 갖고 있다. 때문에 ‘연금제도 정상

화를 위한 연대회의’의 지적처럼 “실질적으로는 [연기금이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금 운용공사에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지적하듯이 이런 식으로 만든 ‘문지마 연기금’을 주식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해외 투자도 늘리려는 데 있다.

이런 투자는 대부분 대형 투자자들과 대기업주들의 이윤을 보전해 주고, 지난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뒤이은 주가 폭락 같은 위기에서 그들을 구출

하는 데 사용될 뿐이다.

수백조 원(2030년에는 2천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에 이르는 이 ‘토종자본’이 국경을 넘는 순간 또 다른 거대 해외투기자본이 될 것이다. 주가 폭락이나 혹은 더 심각한 경제 공황이 벌어졌을 때 단 며칠 만에 폭박 차게 될 가능성도 크다.

사실 자본주의 체제 속에 놓인 초대형 금융자본(연기금)은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과연 이런 식으로 기금을 쌓는 현재의 적립식 연금체계가 불가피한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한쪽에서는 수백조 원의 연기금으로 무슨 잔치를 벌일까 고민하고 한 쪽에서는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지금의 부조리한 상태를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의 노후 빈곤 해결보다 이 기금을 유지하고 키우는 것이 더 우선시되는 압력이 생긴다.

진보진영은 지금부터라도 올해 필요한 연금을 올해, 혹은 1년 전에 보험료로 거둬 지급하는 부과식 연금체계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불어 그 보험료의 대부분을 부자들 과 기업주들이 부담하게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장호중

2차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김하영

노무현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TV 화면을 하루종일 장식했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방법은 극적 효과를 고려해 채택된 것인 만큼, 오래된 분단 장벽을 온몸으로 넘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이 평화의 전도사처럼 구는 태도에 반감을 느끼면서도 적잖은 사람들이 분단의 세월, 공포 열어붙었던 냉전을 돌아봤을 것이다.

62년 전, 한반도는 민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됐다. 일본 패망과 함께 한반도를 나눠 점령한 미국과 소련 양대 초강대국은 남과 북에 각각 친미, 친소 정권을 세웠다.

냉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친미 진영과 친소 진영의 적대는 엄청났지만, 전쟁을 겪은 남북한 사이의 적대에는 비할 수 없었다. 상호 적대와 반감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별과 고통만을 주었지만, 남북한 정권에게는 권력의 버팀목이었다.

서슬 퍼런 반공주의 아래 이남의 수많은 반정부 인사들이 희생돼 왔듯이, “미제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북의 수많은 반정부 인사들이 희생돼 왔다.

교련 수업을 빼먹은 대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 징집되는 사회가 1970년대 남한이었다면, 대학 수업 시간의 65퍼센트가 주체의 원리와 위대한 수령 사상 학습으로 채워진 사회가 1970년대 북한이었다.

전쟁 위협 분위기는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도 도움이 됐다. 1980년대 남한

에서 노동조합 결성 시도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용공” 행위로 낙인찍혔고, 북한에서는 생산력 향상 운동 등의 이름에 군사 용어가 사용됐다 — “70일 전투”에서 “고난의 행군”에 이르기까지.

서슬 퍼런 반공주의

이처럼 냉전은 보통 사람들에게 전쟁 위협과 억압과 개인 삶의 파괴를 안겨줬으므로 냉전이 해소되는 것을 반기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인가?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했을 때 세계적 충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세계를 휩쓸었다. 냉전이 해체됐으니 평화가 오리라는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 간의 군축 회담 등이 그런 기대를 부추길 만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전 세계의 빈부 격차는 더욱 늘었다. 미국은 발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분쟁에 개입하거나 전쟁을 일으켰다.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끝나기는커녕 미국은 더욱 군사적 우위에 의존하고 있다.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냉전 해체가 평화를 뜻하리라는 기대가 다시 한번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사실, 오늘의 한반도야말로 세계적 차원의 냉전 해체가 낳은 불안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이런 기대는 시대착오적이다. 1990년대 초에 미국이 북한을 “강패국가”로 규정한 것은 냉전 해체 이후 세계,

특히 중국이 부상한 동북아시아에 대처하는 한 방법이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냉전 시절에 동북아시아에 배치해 놓은 미군을 유지할 명분도, 냉전 시절에 형성된 동맹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미국이 북한을 위협적 “강패”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동북아시아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기도, 미일 동맹을 재편하기도 어려웠을지 모른다.

물론 미국이 부추긴 북한 위협론이 한반도 분단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를 냈으므로, 아직 끝나지 않은 냉전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라는 의견이 광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냉전이 해체된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비롯한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말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남북의 화해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강대국 간 갈등을 보여 주는 것이지 평화 전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의견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남북의 두 정상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게 아니라 막차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냉전적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도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 지역 안정이나 역외 역할을 내세우므로써 말이다.

그런데 남한은 이 새로운 동맹 재편에 이미 합의했고, 북한 정부도 지역 안정자로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함으로써

이 질서를 인정할 태세가 돼 있다.

남북한 노동자들의 연대

진보진영은 이런 모순적 상황이 제기하는 과제에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한반도 냉전 질서의 붕괴를 지지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이미 시작된 냉전 해체 이후의 제국주의 질서에도 반대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 안정이나 역외 역할을 내세우는 한미동맹에도 반대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이라크 파병이다. 군비 증강도 같은 맥락에 있다.

또, 진보진영은 남북의 화해 협력 과정에서 이미 실종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 남한 정권과 자본은 북한을 값싼 노동력의 원천이자 새로운 투자처로 여기며 단지 자본의 이익을 잘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을 쏟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진보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같은 요구는 물론이고 자유왕래 요구와 탈북자 환영의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북한 민중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지해야 한다.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말이 남과 북의 노동자·민중 투쟁과 그들의 연대를 가로막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은 남북한 정권이 수십년 동안 상호 적대 관계를 이용해 강화해 온 모든 억압과 착취에 도전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 기층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부패 ‘쇼를 하는’ 노무현 측근들

한규한

주류 언론들은 신정아가 거짓말로 “대한민국 상류사회를 농락”했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신정아 개인의 거짓말에 있지 않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부패 시스템에 “위장전입”했을 뿐이다. 가짜 박사 학위는 그곳으로 가는 티켓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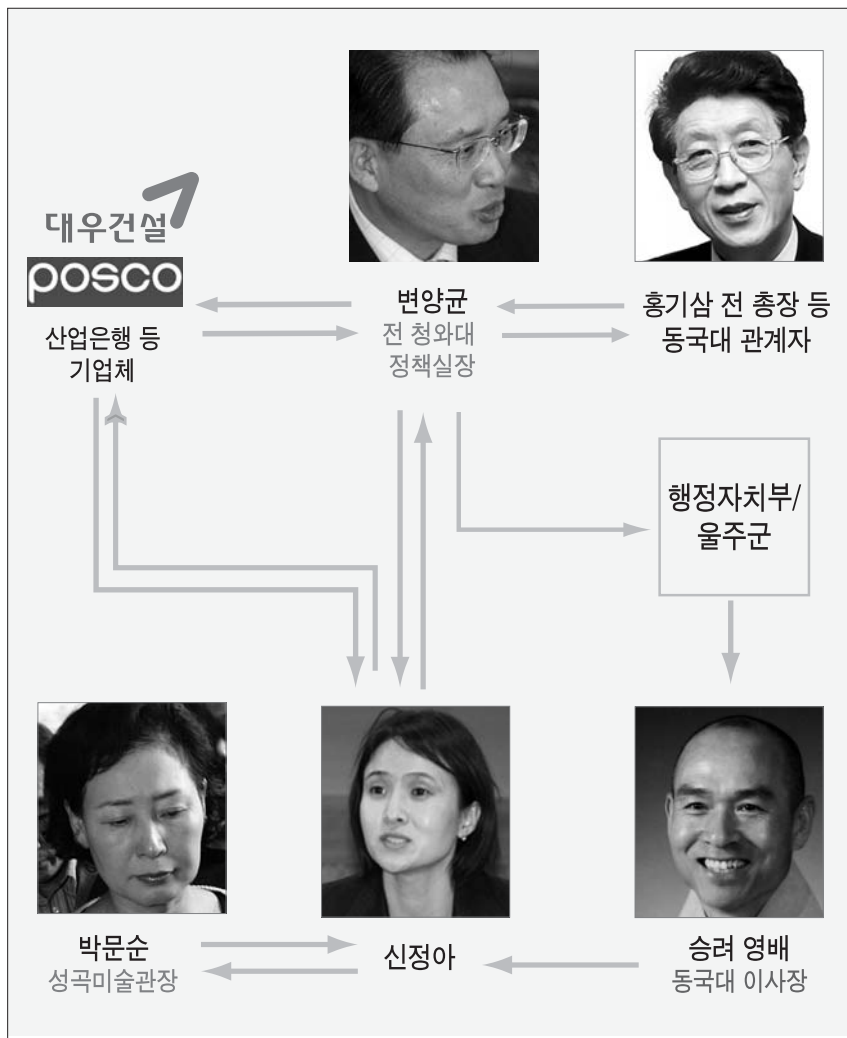
신정아 추문은 “대한민국 상류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힐끗 보여 준다. 부패의 고리는 얹히고 설켜 있었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은 그의 지위를 이용해 신정아의 뒤를 봐줬다. 학계·종교계·재계 유력자들은 신정아 뒤에 있는 힘있는 “오빠”를 보고 각자 나름대로 그녀를 ‘활용’했다.

직위·학벌·연줄·재력과 권력을 이용한 친인척 뒤 봐주기, 이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 정치권을 이용해 자신의 특권 지키기 등등. 이런 일들은 신정아가 ‘전입’하기 훨씬 오래 전에 하나의 구조로 정착돼 있었다.

동국대는 신정아를 채용하는 대신 특혜성 있는 예산을 지원받은 것 같다. 정부는 신정아가 교수로 채용된 2005년에만 2백86억 원을 동국대에 지원했다. 동국대 전 총장 홍기삼은 “학교 발전을 위해” 관련 학과 교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정아를 교수로 채용했다.

신정아를 감싸고돌던 동국대 이사회장 승려 영배는 변양균더러 자기의 절인 흥덕사에 1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변양균이 회장을 맡았던 청와대 불교 신자 모임인 청불회도 부패 사슬의 한 고리 구실을 했다.

포스코, 대우건설, 산업은행, 기아차 등 여러 대기업이 신정아가 근무한 성곡



“대한민국 상류사회” 자체가 부패의 그물망이다

미술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보냈다. 이들의 특별한 예술적 취향 때문은 아닐 것이다. 변양균과 부산과 동기동창인 산업은행 총재 김창록과 대우건설 회장 박세흠 등은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던 변양균의 전화 한 통에 아낌없이 성곡미술관에 거액을 후원했다.

‘박물관·미술관 기부법안’을 낸 노무

현의 ‘오른팔’ 이광재가 신정아를 권양숙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노무현의 또 다른 비서관인 정윤재의 비리는 기업주, 정치인, 고위 관료가 얹힌 전형적인 정경유착형 부패 사건이다. 그는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에게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 그 후 김상진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었고, 국책은행 등

으로부터 3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알짜’ 개발사업들을 따낼 수 있었다.

변양균이나 정윤재는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부패의 사슬

한나라당은 신정아·변양균, 정윤재 부패 추문을 특검을 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난리다. 그러나 이것은 이명박의 온갖 부패 의혹을 가려보자는 속셈일 뿐이다. 정윤재 사건만 보더라도 김상진의 로비는 여권이든 한나라당 인사든 가리지 않고 광범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텃밭이어서 ‘캐면 깎수록 한나라당 인사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연제구 의원 김희정은 김상진에게서 정치자금 5백만 원을 ‘합법적’으로 받았다.

사실, 조선·중앙 등 보수 언론, 한나라당, 검찰, 법여권 모두 변양균·신정아 추문, 정윤재 비리 사건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신정아를 띄워 준 게 조선·중앙 등의 보수 언론이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 등의 정치인·재계 인사·법조인·보수 언론 기자 등이 ‘상류사회’ 사고 클럽 ‘포아’에서 신정아와 서로 어울려 ‘놀고’ 있었다.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올해 3월 검찰은 동국대의 각종 비리에 대한 내사를 돌연 중단했다. 정윤재 사건에는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이 신정아·변양균, 정윤재 사건 조사를 질질 끌며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도 있다. 이들은 모두 부패의 한몸통이일 뿐이다.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노무현은 ‘권력형 비리는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거짓말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 자본주의의 탄생과 성장 자체가 부패와 뿔수 없는 과정이었고, 노무현 정권도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물자를 통제·배분하는 과정은 권력형 부패의 온상이었다. 박정희 정권 들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정경유착이 더욱 심해졌다.

정부는 국가가 소유한 은행을 지렛대로 재벌을 통제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 자금을 대 줄 것인가는 정부에게 달려 있었다. 정부와 유착한 재벌은 몸집을 급속히 불릴 수 있었다.

특혜의 대가로 재벌은 국가 관료들에게 온갖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 현대 그룹은 압구정동의 호화 아파트를 고급

관료와 국회의원 등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국유·공기업들도 부패의 온상이었다. 한국전력·석유개발공사·포항제철 등의 사장 자리에는 박정희의 측근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다.

박정희가 추진한 국가자본주의적 성장 전략과 정경유착에 대해 경제학자 모란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부패는 국유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했으며, 그 결과 부패는 발전과정의 역동적 부분으로 기능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권력형 부패는 끊이지 않았다. 국가와 자본의 유착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엑스파일’ 사건은 정치인·법조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삼성 장학생’으로 만든 ‘삼성 공화국’의 현실을 드러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유화·규

제 완화 과정은 거대한 부패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각종 공기업들이 재벌에 헐값에 팔려나가면서 각종 음성적 로비와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론스타 ‘먹튀’ 사건은 투기 자본 규제 완화 정책이 어떻게 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신자유주의 금융 규제 완화는 불법·투기 자본이 자금 도파·은닉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이런 점들은 오직 시장만이 부패를 해결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교리를 무색케 한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부패의 경계는 합법과 불법의 구분이 의미없을 정도로 희미하다. 예를 들어 공기업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행위는 합법의 탈을 쓰고 이뤄지지만 자본가·국가 관료·정치인 등이 제 배를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의 혈세로 만든 국가 재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부패의 근본 원인이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보

호하기 위해 국가의 보호를 바라는 동시에,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짜라고 정치인들과 국가 관료에 압력을 주거나 ‘로비’를 한다. 자본가들은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합법·불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특정 관료나 정치인들을 매수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쟁이 치열할수록 부패와 탈법은 빈번해진다.

국가 관료나 정치인들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거스르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자본가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그들을 비호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한다. 결국, 자본가와 그들의 언론·국가 관료·정치인들 모두가 거대한 부패의 그물망을 형성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에 분노하고, 이것은 종종 거대한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투쟁은 근본적 대안과 연결돼야 한다. 부패를 진정으로 척결하려면 사회의 부와 그것을 생산하는 수단들을 노동자들이 민주적이고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기업의 나라, 기업의 시대를 마감하자”

진흥당 개싸움 같던 한나라당 경선에 이어서 통합민주신당의 박스떼기, 폰떼기, 노무현 명의 도용 등 ‘개싸움 2탄’은 사람들에게 환멸만 자아내고 있다. 그러고도 평균 20퍼센트를 밀도는 경선 참여율과 경선 중단 사태는 도로열우당의 정치적 파산을 보여 준다.

반면, 진보적 의제를 내걸고 정정당당히 선출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이런 기성 정치권 위기의 공백 속에서 꽤나 늘었다. 가상 삼자대결에선 최고 17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는 여론 조사도 있다.

한미FTA 반대 투쟁, 뉴코아·이랜드 파업 연대 투쟁,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 철군 투쟁 등 한국 사회를 흔든 중요한 투쟁에서 민주노동당이 한 적극적 구실도 지지율 상승에 한 몫했을 것이다.

이처럼 ‘투쟁하는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답게 권영길 후보는 “미디어 선거뿐 아니라 대중 동원과 시위도 중요하다”며 11월 11일 민중총궐기를 적극 주창하고 있다.

또, 권 후보는 “기업의 나라, 기업의 시대를 마감하자”(9월 30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시대의원대회)며 “투쟁을 통해 노동자 세상 만들고,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언론노조 불법 정치자금’을 핑계로 권영길 후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찬물을 뿌린 것도 기성정치의 위기를 파고들 민주노동당의 잠재력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투쟁

그런데 최근 당 안팎에서 권 후보에 대해 온건화 압력을 넣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한겨레〉가 “지난 두 번의 도전과 달리…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며 타협을 종용하는가 하면 김영삼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남재희는 권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당랑거철(螳螂拒輶)” 식으로 헛수고하지 말라고 훈계하기도 했다.

남재희는 강대국에 저항하겠다는 것도, 신자유주의라는 시류를 타지 않겠다는 것도 모두 무모한 짓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민중총궐기도 “그만한 동원이 쉽나”고 초를 쳤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반미’ 정서와 최소 3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는 한미FTA



뉴코아·이랜드 파업 투쟁에 참가한 권영길 후보 - ‘국민적 지지’를 받는 투쟁들이 승리하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대선 승리의 비결이다

반대 여론이야말로 진정한 ‘시류’다.

뜻밖에도, 민주노동당 ‘왼쪽’을 자처하는 사회당 대통령 후보 공보비서 임세환 씨도 남재희를 거들고 나섰다.

“‘혁명’도 ‘전민항쟁’도, ‘1백만 민중총궐기’도 감흥이 없다. 그런 것들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 집권을 도모한다면 목표에 어울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임세환, 〈레디앙〉)

그러나 “현실 정치”에 순응하고 대중 동원을 포기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집권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2002년 여중생 압사 사건에 항의해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직후에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던 것이나, 수십만 명이 보수 세력의 노무현 탄핵에 항의해 거리로 나선 직후인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사상 최고에 올랐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6년 지방 선거 이후 당 지도부가 전보다 한층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와 의회 내 정치에 몰두해 사회연대전략같은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당 지지율은 좀체 오르지 않고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중 행동 건설이 빠진 ‘실현 가능한’ 정책이란 십중팔구 정규직 양보론 같은 후퇴를 의미할 뿐이고 이런 정책으로는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권 후보가 우경화 압력의 눈치를 보며 두 길 보기를 하고 있는 듯해 매우 안타깝다.

시류

권 후보는 당선 직후인 9월16일 오전, 5·18 묘역 참배 직후에 현충원을 참배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담회를 한 사흘 뒤인 20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을 만나 “동지적 관계를 맺자”고 하기도 했다. 10월 1일에는 군복을 직접 입고 해병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분배를 강조하다가 성장도 필요하다고 하는 등 “좌를 보다 갑자기 우를 보[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두 길 보기는 당의 성장뿐 아니라 선거 자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 기업주들이나 우파들이 ‘운동권 정당’, ‘노동자 정당’(종종 ‘민주노동당’이라고 하지만)이라며 민주노동당을 배척하고 증오하는 것은 근거 없는 ‘오해’나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계급적 성격과 본질 때문이다.

이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당이 어떻게 ‘친기업’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런 두 길 보기는 저들의 불신

을 해소시키지는 못하는 반면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신뢰에는 금이 가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불과 며칠 만에 경선 직후 오르던 지지율이 다시 정체하고 있고 “권영길, 왜 이러나”(〈프레시안〉)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후보가 말했듯이 미디어 선거만 할 것이 아니라면 최전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물론 ‘산토끼’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주들이 아니라 노무현의 개혁배신에 환멸을 느껴 그로부터 이반했지만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한 개혁 염원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끔찍하지만 범여권의 ‘개혁사기꾼’들도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개혁 염원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선명하고 급진적인 진보·개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 한미FTA 저지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70퍼센트가 지지하는 뉴코아·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지지하는 자이툰 철군 투쟁에 앞장서 성과를 거둔다면 그 어떤 “현실적인 정책”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 대선 승리로 가는 열쇠일 것이다.

장호중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버마 군사 정권은 학살을 중단하라

강동훈

이번 버마민주항쟁은 지난달 15일 군사정권이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석유값이 급격하게 오른 것 때문에 촉발됐다. 그러나 이미 1년 전부터 물가 급등으로 식수와 전기가 사치품이 되는 등 민생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버마 노동자들은 수입의 절반을 교통비에 쓰고, 나머지 절반으로 식품을 구입해 왔다. 그런데 이번 석유값 인상으로 버스 요금이 2.5배 이상 올라 대다수 사람들이 버스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장까지 걸어다니고 있다.

이렇듯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데도, 군사정권은 예산의 40퍼센트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정권 안정을 위해 수도를 랭군에서 밀림 속의 네피도로 옮기는 데 3억 달러나 썼다.

버마 지배자들은 천연자원을 수출한 돈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다. 최근 랭군에는 고층 아파트와 초호화 브랜드 상품들이 등장했다. 버마 독재자인 탄 쉐가 지난해 딸의 초호화 결혼식에서 신혼부부 선물 비용으로만 5천만 달러를 쓴 사실이 밝혀져 민중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9월 5일 스님들의 참가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이번 시위는 군사정권의 폭력적 탄압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다.

버마 현지 외교관들이 최대 2백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군사정권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런던에 거주하는 코 타이 씨는 자신의 블로그(<http://ko-htike.blogspot.com/>)에 “군정이 사망한 시위대의 시체를 태우고 있다”는 버마 화장터 직원의 말을 전했다.

또, <버마 민주주의 소리>(DVB)는 온몸이 멍든 승려의 시체가 강 위에 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10만 명이 참가했던 대규모 시위 이후 군사정권은 주요 시위 거점과 거리를 점거하고, 승려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사원을 포위하고, 인터넷·휴대전화까지 끊어버리는 등 시위를 봉쇄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 군대가 배치된 버마 최대 도시 랭군에서는 ‘계털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군대가 출동하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식으로 말이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네거리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하나로 합쳐졌다. … 20~30대가 주축인 시위대는 금방 1천여 명으로 불어났다.”(《한겨레》 10월 1일치)

다른 도시들은 군대의 탄압이 랭군보다 심하지 않아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토요일 카옥파다웅

(Kyaukpadaung)에서는 1천 명의 승려가 주도하는 시위에 3만 명이 참가했고, 시트웨(Sittwe)에서는 50명의 승려가 주도하는 시위에 5천 명이 참가했다.

만달레이에서는 승려와 시민들 5천 명이 시위를 벌였고, 모곡(Mogok)에서도 8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있었다.

9월 27일 버마 랭군에서 무자비한 진압을 피해 흩어지는 시위대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얼마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다. 타이로 피신한 버마 난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티나 핑크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승려들을 다루는 것을 보며 엄청나게 분노했다”며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면 랭군에서 시위가 다시 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마 민주화보다 이윤이 우선인 한국 정부

‘87년 6월항쟁의 계승자’임을 자처해 온 노무현 정부는 버마 민주화 시위를 외면한 채 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피묻은 돈’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SK·삼성·현대건설 등 주요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버마 군부와 유착해 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국내의 인권 단체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버마 유전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노동, 강간, 살인 등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도 수출했다.

버마 군사정권의 야만적 학살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에도,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는 사실상 버마 군사정권을 후원하고 있다. 이들은 버마의 천연가스와 목재 등의 천연자원에 큰 이익을 갖고 있다.

이권

특히 중국은 버마의 가장 큰 교역국이고, 버마를 통해 인도양 진출 통로를 확보하려 한다. 게다가 중국 지배자들은 민주화 시위가 티베트나 신장위구르 등의 독립 운동과 중국 민주 운동을 자극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버마 군사정권을

비난하며 역겹게도 ‘민주주의 수호자’인 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우방이기만 하다면 버마 군사정권 못지 않게 폭압적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독재정권을 비호해 왔다.

사실 미국이 버마 군사정권을 비난하는 이유는 중국과 가까운 버마 군사정권을 몰아내고 버마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한국 진보운동의 일부는 ‘미국의 비난을 받고 있는 버마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구심에서 버마 민주항쟁에 대한 지지를 꺼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적의 적이 친구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위선을 비판하면서도 군사정권에 맞서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버마 민중을 지지해야 마땅하다.

한편, 미국의 “부당 간섭”은 비난하면서도 버마 군사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태도도 잘못이다.



계속되고 있는 버마 민주항쟁 연대 운동

한국에서도 9월 27일부터 버마 군사정권의 탄압에 항의하는 운동이 신속하게 건설됐다.

잇달아 열린 촛불집회와 버마 대사관 앞 항의 집회들에서 버마인과 한국인이 함께 버마 민주항쟁을 지지하고 군사정

권을 규탄했다.

9월 30일에 열린 버마 대사관 앞 집회에는 한 번도 집회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는 버마 이주노동자들도 대거 참가해 2백50여 명이나 모였다.

같은 날 부평역에서는 거리

선전전과 촛불집회가 열렸고, 부산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10월 2일 버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버마민주 학살중단과 군부퇴진 촉구 기자회견’은 버마 민주항쟁에 대한 연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한국 사회당의 금민 대선후보, 임종인 의원뿐 아니라 평일 낮인데 광주·완도 등지의 지역 활동가들도 함께했다.

버마 민주민족동맹(NLD)

한국지부 조모아 집행위원은 혹독한 탄압에 시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버마 내 민주화 운동가들이 조만간 다시 조직해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마 민주화 지지와 희생자 추모 촛불문화제

일시: 10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교보문고 소공원 앞

버마 민중항쟁, 어디로 가야 하나?

다. 그리고 평범한 병사들이 민중 편으로 넘어오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운동의 과제들

운동은 또, 버마의 오랜 민족 갈등 문제도 다뤄야 한다. 버마족이 아닌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들은 결코 버마 국가를 반기지 않았다. 많은 소수민족 집단들은 1948년 버마 독립 이후 중앙 정부에 맞서 줄기차게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소수민족 단체인 카렌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이 버마 군인들에게 총구를 자신의 장교에게 돌리라고 촉구하면서 민주주의 운동을 매우 분명하게 지지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민주주의 운동은 이런 연대 행동에 보답해서 소수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한다. 과거에 버마 독립 운동의 지도자들은 다른 소수민족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하는 것을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다. 수치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그래서 소수민족들의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했다.

버마의 노동계급이 결정적 구실을 할 것이다. 우리는 버마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잘 조직돼 있는지 잘 모른다. 공개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988년에 버마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훌륭하게 성공시켰다.

버마의 노동자들은 섬유와 석유 산업에 집중돼 있다. 또, 국경 바로 너머 타이의 매솿(Mae Sot) 같은 도시들에도 버마 노동자들의 대규모 수용소들이 있다. 이런 난민 노동자들은 조직돼 있고 버마 국내의 노동자들과 연계가 있다.

대중 운동이 억압적인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1986년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 맞서, 1992년 5월 타이의 수친다 크라프라운 장군에 맞서, 1998년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수하르토에 맞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운동은 파업이나 게릴라식 시위 같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고, 하급 병사들과 우애를 나누며 그들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일은 모두 위험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직 버마 민중만이 군사정권을 끌어내릴 힘을 갖고 있다.

버마에서 급진화한 많은 청년들이 승려가 됐고 이들이 이번 투쟁에서 주요한 구실을 했다

자이 자일스 웡파콘
타이 좌파단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출라롱콘대학 교수

주류 언론은 각국 정부의 선언과 유엔의 구실이 버마 군사정권의 학살을 저지할 수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실제 투쟁은 버마의 여러 도시와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텐안먼 광장 학살을 자행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버마 군부를 제어할 것이라는 생각은 웃기는 발상이다.

서방으로 말하자면, 동남아시아 각국의 군사정권을 지지한 오랜 전력이 있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버마의 최근 시위들은 버마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서방 열강에 의존해서는 변화를 이룰 수 없고 자신들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자각을 한 데서 비롯했다.

과거 버마에서 일어난 위대한 민중항쟁을 8888운동이라고 부른다. 1988년 8월 8일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 운동은 경

제 문제를 둘러싼 학생들의 항의 시위로 시작됐지만 금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 항쟁이 패배한 뒤 여러 해 동안 활동가들은 사기가 떨어졌고 미국이 버마 군사정권에 압력을 가해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고 민주주의 이정표를 제시하도록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교훈을 배웠다. 올해 초에 활동가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는 사원에서 ‘기도 행진’의 형태로 공개적인 항의 행동들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연료 가격이 5백 퍼센트 인상되자 승려들의 대규모 시위들이 벌어졌다.

지난번 투쟁의 교훈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감을 얻어 승려들의 시위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으로 급진화한 청년들 수백 명이 승려가 됐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군사정권이 대학들을 폐쇄하거나 대학 진학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사원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에

더 안전한 장소였다. 마치 1979년 이란 혁명 때의 모스크나 옛 공산정권 치하 폴란드의 가톨릭 교회처럼 말이다.

오늘날 버마의 민주주의 운동은 1988년보다 경험이 많다. 20년 전에는 수치와 그녀의 정당인 버마 민주민족동맹(이하 NLD)이 운동을 지도하도록 허용할 태세가 돼 있었다.

지금은 운동의 진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다. 수치와 모든 정치수들이 당장 석방돼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급진파들은 운동의 지도력을 NLD의 손에 내맡기기를 꺼린다.

많은 활동가들의 뿌리는 8888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거리에 나오는 수천 명의 청년들은 그 때 너무 어려서 운동에 참가할 수 없었던 세대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새로운 세대가 정치적으로 급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용기와 희생 정신으로 군부에 저항할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 주는 조짐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군사정권을 타도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압에 맞선] 반격이 필요한 것이

8888항쟁

뜨겁게 타올랐던 민주화 열망

1988년 8월 8일 아침 총파업이 랑군 항만에서 시작돼 도시 전역의 관공서로 번져나갔다. 성직자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 각종 사람들이 군부 통치 종식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에게 발포해 약 3천 명을 살해한 군사정권의 야만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당시

의 군사독재자 네 윈은 물러나야 했고 군부는 총선 실시를 약속해야 했다.

그러나 운동은 투쟁을 계속해 군사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됐다. 아웅산 수치는 시위대에게 해산하라고 말하며, 군대를 신뢰하고 군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운동의 에너지는 선거 정치로 돌려졌다. 1990년 실시된 선거에서 수치의 NLD가 4백85석 가운데 3백92석을 차지했지만, 군사정권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독재 정권이 들어섰고, 수치는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 그러나 버마의 운동은 이미 약해져서 수치를 도와줄 수 없었다.

“지금도 버마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강동훈 기자가 버마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 씨를 만나 버마 현지의 투쟁 상황과 배경에 대해 들었다. 마웅저 씨는 자신을 난민이자 이주노동자, 고국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화 운동가라고 소개했다. 8888항쟁 참가자인 그는 군부독재의 가혹한 탄압으로 버마의 시위가 잠시 소강인 듯 보이지만 수백, 수천 명 단위의 시위가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에는 언제 오셨고 버마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1994년 7월에 버마를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버마판 5·18항쟁인 1988년 버마 민주항쟁에 고등학생으로 참가했어요. 그 뒤부터 반군부독재 운동을 했어요. 1990년 5월에 총선거가 있었는데 그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 홍보 활동을 했고 저도 거기에 참가했습니다. 총선거 이후에도 반군부독재 활동을 하면서, 총선거에서 선출된 민간 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하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1992년과 1993년에 민을 만난 친구와 선배 들이 다 체포당했어요. 저도 체포당할 것 같아서 피신해 국제 연대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브로커를 통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얻어서 한국에 왔어요. 농담 한마디 하자면, 민주화 운동 하려고 비즈니스 비자 얻어 온 셈입니다.

최근 버마 민주화 운동 상황은 어떻게니까?

이번 시위는 우연히 일어난 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총선거로 선출된 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군부

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인권 탄압·정치 탄압·강제 노동·강제 이주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던 중 지난 8월 15일에 기름 값이 갑자기 올랐어요. 경제 문제가 심해지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8월 17일에 시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주 뒤부터 민주화 요구가 포함됐어요.

8월 17일부터 계산하면 한 달이 훨씬 넘은 것이지요. 9월 5일에는 스님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했어요. 그날 스님들이 폭력 탄압을 당했어요. 전봇대에 묶어 때리고, 옷을 벗기고, 체포하고 …. 우리는 일본과 영국의 식민지 시대를 거쳤지만 그 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버마인들끼리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시민들이 엄청 화났지요.

버마에서는 스님들이 국민들의 절대적 존경을 받습니다. 스님들은 “17일까지 사과해라. 그러지 않으면 18일부터 총파업하겠다” 하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17일까지 아무 대답이 없었고 스님들이 18일부터 전국에서 총파업했어요.

스님들의 총파업이란 스님들이 정부와의 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군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통치해 왔죠. 하나는 총을 이용해서, 다른 하나는 불교를 이용해서, 매일 신문의 1면에 군인들이 절에 가서 기원하거나 시주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총파업은 군인들더러 절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버마 사회에서 이 의미는 큰 거예요. 스님들이라면 모든 동물까지 사랑하는 건데 군인들과 관계를 끊는다면 그들이 동물보다 못하다는 거니까요.

밤에 군인들이 군용 차량을 이용해 시체들을 옮기고 불태운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인데다, 낮에도 군인들이 거리를 지키고 있어서 [얼마 전처럼] 5만 명,

요새도 버마에 연락이 닿나요?

2, 3일 전까진 아내하고 연락이 됐어요. 근데 인터넷이 완전히 폐쇄당했고 전화 연락도 힘들어요.

지금까지 실종된 사람이 몇 천 명이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시위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하러 가거나 학교 간 사람들도 연락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큰 절에 들이닥쳐 스님들 몇 백 명을 잡아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밤에 군인들이 군용 차량을 이용해 시체들을 옮기고 불태운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인데다, 낮에도 군인들이 거리를 지키고 있어서 [얼마 전처럼] 5만 명,

10만 명 규모의 시위는 계속 못하지만, 5백 명~1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군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면 시위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내 군부독재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조직되고 있나요?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 단체나 노동자 조직이 있나요?

1974년 ‘버마식 사회주의’가 선포되면서 모든 조직들이 불법으로 폐쇄당했어요. 그 전에는 학생·노동자·농민 등 여러 조직들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군부독재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국제 사회에서는 아직도 버마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버마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버마에는 한국의 한총련처럼 유명한 학생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있었어요. 해방운동 지도자들이 이 단체 출신들이예요. 이 단체도 1974년 이후에 폐쇄당했지만 지하운동은 계속돼 왔어요.

1988년 항쟁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참여했고, 그 때 노동자·농민·공무원들의 단결이 잘 돼서 성공했어요. 군인과 경찰들까지 참가했죠. 결국 군부독재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 1990년에 총선거를 실시했어요. 물론 군부가 그 약속을 어겼지만요.

지금 버마에서 시위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가택연금 상태이고, 제2의 아웅산 수치들은 8월 21일에 다 체포당했어요. 학생 지도자 13명이 포함해서 2백 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체포된 거예요. 지금 숨어서 운동하는 지도자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운동지도자들을 체포하면 시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시위가 있습니다. 이 시위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시위, 아레로부터 민주화 운동이라고 봐요. 1988년 항쟁도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에서 시작됐죠.

1988~89년에 체포된 학생 지도자들이 2003년부터 풀려나면서 기층 운동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민주화 항쟁 기념 행사와 인권 단체 활동이 생기고, AIDS 환자 지원 모임, 강제노동·강제이주에 반대하는 모임과 참가자들이 생겨났

어요. 이처럼 아래에서부터 준비한 효과가 지금 시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버마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버마의 초등학교 교사 월급은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핸드폰이 3백만 원 정도 돼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버마 경제 문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사회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스님들이 이번 시위에 참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버마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한 시민들이 절에 밥 얻어먹으러 오니까요, 스님들도 아침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시주해서 먹는데 말입니다.

버마는 농업국가예요. 60퍼센트가 농민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밥 한 끼 먹기 힘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버마에는 천연가스와 기름이 많아요. 대우도 가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경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교사뿐 아니라 대학 교수도 월급으로 가족들의 사생활을 해결할 수 없어요. 돈벌기 어렵고, 물가도 비

쌉니다. 1988년에 일어난 시위는 민주화 요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인데 지금은 경제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버마에 있는 제 친구와 선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위가] 2007년 안에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군부독재가 온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4가지 요구사항[기름값 폭등과 관련된 경제문제 해결, 승려 폭행에 대한 사과, 연행자 석방, 아당 지도자들과 대화에 나설 것] 한 편집자이 받아들여져서 민주화를 위한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연대 운동을 건설하고 계신데,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아무 생각 없이 버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때문에 강제 노동·강제이주·인권 탄압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외교 관계를 포함해 모든 일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현재 버마 상황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국제 사회가 버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한다. 관심 있다는 이야기와 성명서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버마의 시위는 한국의 6월 항쟁과 같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5·18 민주화 항쟁을 다룬 최근 영화 <화려한 휴가>는 버마의 8888 이야기가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영화 대사 중에 마음에 와 닿고 계속 기억되는 게 있어요. 끝부분에 여성 활동가가 “저희는 도청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외치잖아요.

저도 그 여성의 말을 빌려서 한국 시민들한테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현재 버마 시민들이 아시아의 평화, 버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정리 강동훈 · 김하영

‘국제 사회’의 개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버마의 역사가 주는 교훈

자이 자일스 옹파곤 타이조파단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출라롱콘대학 교수	
버마 정권의 야만성에 몸서리치는 많은 사람들이 “국제 사회”가 버마 사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마에 대한 외세 개입의 역사는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이 항상 버마인들의 상황을 악화시켰음을 보여 준다. 단연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세력은 영국 제국이었다. 19세기 내내 영국은 인도에서 버마로 꾸준히 침투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마의 서부를 점령하더니 나중에는 이라와디 강 하구의 삼각주 지역도 점령했다. 마침내 1885년에 영국은 버마 영토 전체를 점령하고 국왕을 퇴위시키고 버마를 인도에 합병했다. 영국의 침략은 군대가 마을을 불태우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대거 처형하는 등 철저하게 야만적이었다. 버마를 지배하게 된 영국은 지체없이 버마의 경제와 환경을 약탈했다. 이라와디 강 삼각주의 망그로브 숲을 베어버리고 논으로 만들었다. 영국의 독점 기업들은 버마의 석유·티크나무·루비를 약탈했다. 그 뒤 20여 년 동안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만행으로 버마 사회는 해체되고 갈갈이 찢겨졌다. 영국은 버마의 다양한 소수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간질 시켜 각개격파하기’ 전술로 지배권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버마의 독립 운동은 20세기 초에 서서히 등장했다. 처음에 그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승려와 학생 들이었다. 그들의 평화 시위는 씨알도 안 먹혔고, 1930년대가 되자 타킨(Thakin)이라는 새로운 급진적 학생 운동이 등	1885년 영국군이 버마를 침략해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장했다. 아웅산, 우 누, 네 윈 등이 그 운동의 지도자였고, 그들은 이윳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려 했다.

제2차세계대전이 터지자 아웅산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그는 버마독립군을 결성했다. 버마독립군은 일본과 손잡고 영국에 맞서 싸웠다.

버마국민군

1942년 일본이 버마를 점령하고 형식적 독립을 승인했다. 그러나 버마인들은 곧 새로운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옛 제국주의 지배자들과 거의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자, 버마국민군으로 이름을 바꾼 아웅산의 부대는 이제 영국 편에 붙었다.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은 버마나 아웅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했다. 일각에서는 반역죄로 아웅산을 처벌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아웅산의 인기와 강력한 버마 민족주의 운동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다.

결국 영국은 협상에 나섰고 버마의 독립을 승인했다. 1948년 1월 마침내 버마는 독립했다. 그러

나 1947년 7월 19일 회담장에 난 입한 무장 세력이 아웅산과 그의 각료 대다수를 총으로 살해했다.

아웅산 살해는 서로 경쟁하는 버마 정치인들의 소행으로 돌려졌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아웅산 살해 음모에 영국군 장교들이 어

면 식으로든 연루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누구 소행이든 간에, 아웅산이 죽은 뒤 버마의 민족 운동은 급속하게 분열해서 자

가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우 누가 신생 독립국 버마의 지도자가 됐고, 네 윈은 군대의 우두머리가 됐다. 군대는 공산주의 게릴라 세력을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되거나 중앙 정부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탄압하는 데 동원됐다.

1960년대 초에 우 누는 버마에 대한 통치권을 급속하게 상실하고 있었다. 1962년 네 윈이 미국과 영국의 승인을 받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지속된 군사 정권의 시대를 열었다.

버마 군부는 처음에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군장성들이 경제를 책임지고 그들 스스로 새로운 지배계급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 의존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방 정부들은 버마의 끔찍한 인권 탄압 전력을 거론하며 호들갑을 떠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와 맞을 때는 그 지역의 독재 정권들을 아주 기꺼이 지원했다. 버마 민중이 서방의 도움으로 자유를 쟁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영국 식민지 시대 루비 광산에서 일하는 버마 노동자들

판을 깨기도 약속을 하기도 싫은 미국

김하영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는 잠정적 합의만을 마련한 채 휴회됐다. 합의문은 본국 승인을 받은 뒤에야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많이 양보한 듯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한 반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한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천영우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는 것도 북한이 수용을 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엿박자 속에서 진행됐다. 한편으로 북한-시리아 핵 거래설이 미국 내에서 떠들썩하게 흘러나왔다. 미사일 기술 이전 혐의로 북한 기업들이 또 다시 제재도 받았다. 제재받은 기업 가운데 하나인 조선부강회사는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북한 기업이다. 회의 시작 이틀 전에는 부시가 북한을 “야만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한편, 부시는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가 진행중인 지난 9월 28일 다른 사인도 보냈다. 미국 법 조항의 적용을 유보한 채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13합의대로 중유를 제공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이런 엿박자 가운데 어떤 것을 강화시키느냐는 북한 손에 달렸다는 압박이 회의 내내 북한에 가해졌을 것이다. 흡족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협상 동력이 계속 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미국 내 강경파가 다시 세를 얻을 것이라는 논리로 말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도 이런 논리를 강화했을 것이다.

결국 논란의 핵심이 돼 온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북한이 미국의 구두 약속을 믿어 주는 식으로 됐다.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고도 약속 어기기를 밥먹듯 해 온 미국이 공개하기를 꺼리며 속삭이는 귓속말 약속

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기에 '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행동 대 행동이라는 대전제가 무색한 지경이고, 아직 불확실성의 존재만이 확실할 뿐이다.

귓속말

물론 미국은 협상 판을 깨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약속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북한도 협상이 깨지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단을 모두 내줄 수는 없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북한 핵시설 불능화 수준은 이런 상황을 어정쩡하게 반

웃음 대 웃음? - 행동 대 행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웃음은 계속될 수 없다

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애초 미국은 핵폐기에 가까운 수준의 불능화를 원했다. 핵시설들의 핵심 부품을 제거해 아예 제3국으로 옮기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2년과 달리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핵시설을 다시 가동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제거된 핵심 부품을 북한 내에 두고 제3자가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원상 복구에는 약 1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제네바합의(핵 동결)보다는 1년을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도 여전히 핵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

는다.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핵무기 보유가 이런 약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는 3단계에 가까운 2단계가 아니라 1단계에 가까운 2단계에 머물렀다. 게다가 신고된 핵 프로그램 검증이라는 절차와 핵무기 신고라는 진정으로 뜨거운 쟁점도 남아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소위 6자회담의 동력이 근근히 이어졌다 해도 미국이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전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미국은 더는 상황이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달렸다고만 얘기하기 어렵게 됐다. 이것은 전에도 진실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 점이 더 선명해졌다.

일본 새 총리 후쿠다의 어두운 앞날

[편집자 주] 일본 평화운동 단체 '세이 피스 프로젝트'(Say Peace Project) 활동가인 김송 씨가 아베 사임 이후 일본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지면관계상 축약 게재한다.

지난 9월12일 아베가 사임하고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가 됐다. [이번] 여름 동안 일본의 정치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7월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에 대패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베 정권의 연금과 부패 문제였다. 놓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교육기본법 개악과 개헌수속법 강행으로 나타난 아베정권의 개헌·강경

노선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개헌 반대] 여론을 두려워해 개헌 문제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의 조사를 보면 이번에 당선한 민주당 의원의 68.5퍼센트가 9조 개헌에 반대했다. [이 사실은] 이번 참의원 선거의 분위기를 상징한다.

[아베의 뒤를 이은] 후쿠다 내각의 성격은 10월 1일 그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잘 드러났다. 그는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했고,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 청산과 대화를 언급했다. 아베가 추구했던 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그는 언급하지 않

았다. 또, 그는 신자유주의를 계승한다면서도 양극화의 "실태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그의 이 날 연설은 아주 미온적이었는데, 이는 후쿠다가 자민당 권력의 안정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당과의 연립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군국주의화 노선을 더는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자민당은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러나 '교과서네트21'의 타와라 씨가 지적하듯이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일본회의' 내각이며 '신의 나라' 내각이고 극우 정권"이다.

후쿠다는 최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 '헌법조사추진의원연맹',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의원모임'에 소속돼 2001년까지 해마다 [야스쿠니를] 참배해 왔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참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다음 참의원 선거 전 3년 동안 자민당은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꺾어야 안 된다. 후쿠다의 협조 노선은 이런 조건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참의원 과반수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민주당은 사민당·공산당 등과 협력해야 할 형편이다.

일본의 좌파는 이 호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 이집트를 뒤흔들다

호썸 알 하말라위
이집트 언론인, 사회주의자

중동에서 가장 큰 직물 공장을 멈춘 [점거] 파업이 일어났다.

가즐 알 마할라 공장에는 2만 7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투쟁들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이번 파업은 지난 겨울 파업 때 제기된 요구들 대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중요했다. 지난해 정부는 파업 물결 속에서 터져 나온 노동자들의 요구들을 올 7월에 시작되는 새 이집트 회계 연도에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가까스로 파업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됐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가즐 알 마할라 노동자들이 맨 먼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부패한 노동조합 관료들은 [파업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투쟁했다. 전체 노동자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다. 예컨대, 지도적 활동가 여러 명이 체포된 뒤 일부 파업 조직자들은 투쟁의 수위를 낮추려 했다. 활동가들은 석방된 후 전체 노동자 모임에서 연설을 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제 파업을 접을 때라는 암시를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성난 목소리로 그에게 외쳤다. “우리는 파업을 강행할 것이요!” 그러자 그는 입장을 바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파업 조직자들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전투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규찰대

노동자들은 공장을 순찰하는 자체 규찰대를 조직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이프타르’[라마단 동안 금식 후 저녁에 먹는 기름진 음식]용 음식을 조달했고 라마단 금식을 같이 끝냈다.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2006년 12월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처음 시작했고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파업 연대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났다. 카이로 부근의 헬완 철강 공장, 나일강 삼각주의 직물 공장 등 이집트 전역의 노동자들이 연대 행동을 조직했다. 알렉산드리아 부근의 카프르 알 다와르 직물 공장 노동자들은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이집트 노동계급은 아랍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가즐 알 마할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랍 전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10개월 전 일어난 가즐 알 마할라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집트판 ‘불만의 겨울’을 촉발했다.

다른 부문 노동자들은 가즐 알 마할라 노동자들을 모범으로 여기고 있다. 나는 최근 이집트항공 승무원들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노동자가 친정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비판한 후 이렇게 물었다.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직물 공장 노동자들처럼 파업해야 할까요?” 그들은 고임금 노동자들이지만 가즐 알 마할라 직물 노동자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다.

더 자세한 파업 정보는
<http://arabist.net/arabawy>를
참조하시오

갈수록 전투적이 되는 이집트 노동자 투쟁의 배경

앤 알렉산더
중동 전문가, BBC 국제부

카이로 북부의 가즐 알 마할라 직물 공장의 노동자들은 집에서 만든 북과 현수막을 들고 와 공장 앞마당에 텐트를 쳤다. 공장은 한 주 동안 토론의 광장이 됐다.

전투 경찰이 공장 외곽에 모여 있는 동안, 2만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1백 50일치 일당에 상당하는 보너스 지급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공장을 점거했다.

일주일도 안 돼 승부가 판가름났다. 노동자들은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에게 굴욕적 패배를 안겼다. 파업 노동자들은 1백30일치 일당과 통근 교통 서비스 개선을 얻었을 뿐 아니라 회사가 공장장과 부패한 국가 노조의 지역위원장을 해임하도록 강제했다.

지난주 가즐 알 마할라 파업은 갈수록 전투적으로 되는 이집트 노동계급 투쟁의 일부였다. 이 대형 국영 방직 기업의 노동자들은 2006년 12월에 정부와 경영진의 타협을 얻어내 파업 물결을 촉발한 바 있다.

지중해의 알렉산드리아 시(市) 근처

카프르 알다와르에서는 1만 2천 명의 방직 노동자들이 가즐 알 마할라 노동자들의 승리에 고무받아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했다. 사유화된 가즐 시빈 알콤폴의 노동자 4천여 명 중 4분의 3이 새 공장주의 출근을 앞두고 공장을 점거했다.

파업 투쟁이 승리할 때마다 또 다른 파업이 시작됐고, 이 과정은 우편 노동자, 운송 노동자, 카이로의 알 아자르 이슬람 대학의 교사 노동자 등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확산됐다.

분노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함께 분노도 높아졌다. 올해 이집트 야채 가격은 37.6 퍼센트나 올랐다. 지난해 12월에만 물가가 12퍼센트나 올랐다. 가즐 알 마할라의 많은 노동자들은 한 달에 4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한 여성 파업 노동자는 지난주 가즐 알 마할라 파업 현장을 방문한 기자에게 “고기요? 그게 어떻게 생겼죠?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지를 못해서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집트 경제는 2004년부터 연평균 7퍼센트 성장을

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세계은행은 2007년 경제 개혁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이집트를 꼽았다. 가즐 알 마할라의 모(母)회사인 미스르 방직은 올해 약 2억 이집트파운드(약 3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무바라크 정권은 여러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다. 2005년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 물결이 있었고, 이듬해 법관들이 선거 부정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며 행진해 전투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지난 수년간 부글부글 끓어왔다. 가즐 알 마할라의 노동자들은 지난주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세계은행의 지배를 거부한다! 우리는 식민주의의 지배도 거부한다!”

자치 조직인 ‘노동조합 · 노동자 복지 센터’의 활동가이자 파업 조직자 중 한 명인 무함마드 알 아타르 씨는 지난주 대규모 시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부가 퇴진하기를 바랍니다. 무바라크 정권이 몰락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노동자 권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노동은 그 자체로 정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코스타리카 30만 명이 반FTA 시위를 하다

지난 9월 30일 코스타리카 수도 산 호세에서는 10월 7일 FTA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FTA에 반대하는 30만 시위가 벌어졌다. 친미적인 산체스 정부는 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 참여를 통해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한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최근에 FTA반대국민투쟁위원회(CNLJLC)를 중심으로 반FTA 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왔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사회주의와 노동조합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노동조합이 하는 구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구실은 항상 전략·전술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태도는 개량주의자들·아나키스트들·신디칼리스트들과 여타 급진파들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역사적 경험을 보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계급이 선택한 조직 형태 가운데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광범한 조직 형태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근본 기능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임금·노동조건을 방어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들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조합원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노동조합 운동의 출발점은 계급투쟁이다. 즉,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사는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증대시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애쓰는 기업주(자본가)들 사이에는 상시적이고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계급투쟁

그래서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조합 투쟁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그런 투쟁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말이다. 대체로는 그렇다. 그러나 아주 가끔 노동조합이 반동적인, 예컨대 인종차별적이거나 여성차별적인 운동을 펼칠 때도 있다.)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 원칙 — 못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등 — 은 사회주의자들과 맑스주의자들의 원칙이기도 하다. 물론 분명히 맑스주의의 원칙들은 노동조합 운동의 원칙들을 넘어서나.

이렇게 노동조합 운동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태도는 맑스주의와 다른 다양한 경향들을 구분하는 특징이었다. 일부 사회주의 종파들(예컨대 19세기의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자 대중의 처지를 전혀 개선시킬 수 없다며 노동조합 운동을 배척했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노동조합 투쟁으로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맑스는 자신의 소책자 《임금, 가격, 이윤》에서 이런 주장을 날뜰이 논박했고, 역사도 맑스가 옳았음을 분명히 입증했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재론하지는 않겠다.

혁명가나 급진주의자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은 노동조합 투쟁이 단지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라거나 노동조합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되면 노동자들이 부패하거나 자본주의에 순응할 것이라는 이



노동조합은 노동자 대중의 단결 투쟁을 가능케 하지만 혁명적 지도력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를 들어 노동조합 투쟁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계급 전체)의 이익이 인류의 이익이므로 노동계급의 이익은 자제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추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혁명은 노동자들의 자기 희생을 통해 추구해야 할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노동자들과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가장 유력한 태도는 개량주의자들의 태도이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긍정적 구실을 인정하지만, 아주 협소한 한계 안에서만 그렇다. 개량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부문적·경제적 이익을 방어해야 하지만 더 광범한 정치 투쟁은 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치 정당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은 정당한 것이지만 계급을 뛰어넘는 더 광범한 국익에 종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투쟁이 항상 경제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치 투쟁의 무게중심은 의회가 아니라 작업장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국익 개념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은폐하는 신화일 뿐이다.

따라서 맑스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 안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전투성을 고양시키고 노동자들이 정치적 문제들을 제기하도록 고무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와 동시에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이 비록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 구실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유일한 조직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계

첫째,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은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력 판매 조건을 둘러싸고 협상하는 것인 반면, 사회주의의 목표는 그런 노동력 판매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이 말은 노동조합 자체는 자본주의의 실질적 전복을 조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 과제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노동력 판매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사회의 잠재적 지배자로서 대표하는 노동자 평의회도 필요하다.

둘째, 기업주들과 효과적으로 협상하려면 노동조합은 관련 산업·업종·작업장의 모든 노동자들을 그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나 전투성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많이 광범하게 포괄하려 애써야 한다.[모든 법적으로는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 예외는 조직된 파시스트 노동자들이다. 그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서 쫓아내야 한다 — 몰리뉴]

이런 필연적 포괄이 뜻하는 바는,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육적·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조합은 노동계급 안에서 사회주의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주도하

거나 격렬한 충돌의 시기에 노동계급에게 정치적 지도력을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과 직장의 경계를 뛰어넘어 노동계급의 가장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인사들을 결집시킨 혁명정당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에는 결정적이고 고유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노동조합 관료주의에 대한 분석이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쓰라린 경험들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사회주의 혁명뿐 아니라 자기 조합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투쟁조차 배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줬다. 노동조합 최상층 지도자들뿐 아니라 노조 상근간부 전체가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런 경향은 너무 확고해서 도저히 개인적 결함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경향은 노동조합 상근간부들이 독자적인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기층의 현장조합원들과 다르다. 그들이 노동계급과 사용자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노조 상근간부들은 일반 조합원들보다 임금도 더 많고 근무조건도 더 낫다. 그리고 심지어 협상이 잘 못 돼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그들 자신은 일 자리를 잃거나 더 오래 일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철저한 배신자나 사용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조합원이 아무도 없다면 그들은 봉급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동요하면서 때로는 저항을 조직하고 좌파적 언사를 늘어놓다가 때로는 후퇴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발 밑에서 무너뜨린다.

노동조합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은 이 확고한 경향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주의 투사들은 노조 지도자들과 상근간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이 동요하거나 배신할 때는 맞서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투쟁을 지지하고 노동조합 자체에서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조합 안에서 노조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필요하다면 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현장조합원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된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등록금을 두 배로 올리려는 고려대 당국

〈한국경제〉는 고려대 당국이 경영대 등록금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내년 신입생의 한 해 등록금은 1천7백4십만 원이 된다! 인문·사회계열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며 다른 대학들도 따라 갈 것이다.

즉각 반발이 터져 나오자 고려대 당국은 '성적 하위 15퍼센트에 속하는 학생만 두 배로 올리고 상위 30퍼센트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아직 계획일 뿐 결정은 안 됐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대폭 인상을 준비 중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려대 당국은 엉뚱하게도 이런 방안이 3불정책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여입학제가 불가능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능이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 우수 학생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도 했다. 돈 많은 학생이 곧 우수 학생이라는 말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돼 아예 가난한 서민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려는 고려대 당국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일은 대학 신자유주의화에 반대하던 학생들이 출교시킨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0월 2일 고려대 민주광장에서는 1백50명이 모여서 긴급 규탄 집회를 했다. 여기서 정경대 학생회장은 "고려대 당국이 출교와 등록금 인상으로 한국 사회를 선도하겠다면 우리는 출교 철회와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으로 한국 사회를 선도하자"고 말했다.

서범진



토빈세와 투기 자본 규제 요구를 지지해야

나는 〈맞붙〉 정성진 교수의 칼럼을 애독할 뿐 아니라, 그의 저서나 논문도 빠짐없이 읽으려 노력하는 일종의 팬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상당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자본주의의 적당한 개량에서 찾는 상황에서, 〈맞붙〉 58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개량주의적 대안 비판 칼럼은 유익했다.

다만 정성진 교수는 개량주의적 대안 비판에 집중하느라, 그런 주장이 담고 있는 긍정성을 사주는 데 지나치게 인색했던 것 같다.

토빈세나 투기 자본 규제 요구가 지지받는 것은 노동자들의 현실의 필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투기 자본의 인수 합병과 '먹튀'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오리온전기, 만도기계, 하나로텔레콤,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등에서 노동자들은 투기 자본의 수익을 위해 대량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투기 자본과 싸우면서 노동자들은 투기 자본 횡포가 자본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함을 깨닫기도 한다. 정성진 교수가 "파생금융상품 문제를 진정으로 제기할 경우 ... 자본주의의 문제 그 자체와 정면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뜻일 것이다.

나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토빈세나 투기 자본 규제 요구를 내건 투쟁을 지지하



론스타 불법매각 원천무효 촉구 1백만 인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러 가는 외환은행 노동자들

면서 혁명적 대안을 설득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투기 자본 통제 요구의 의의를 과장해선 안 되지만, 그 자체로 일정한 긍정성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투기 자본 통제와 토빈세 도입은 이윤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시장이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투기 자본 규제와 토빈세 도입 요구 투쟁은 자본 논리에 대한 도전해 함축한다는 점에서 더 심오한 투쟁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

정종남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또 다른 측면

나는 〈맞붙〉 58호의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문제점'이라는 기사가 파업을 유보하고 정몽구 재판 결과에도 침묵한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도부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균형있는 평가가 되려면 올해 현대차지부가 얻은 성과도 충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회사 측은 상여금 대폭 인상,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 등 실질적 양보를 했다.

현대차정규직지부의 성과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도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조합비 일괄 공제라는 성과를 거뒀고, 일부 해고 조합원들이 복직되기도 했다.

많은 언론에서 '10년 만의 무분규'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현대차 노동자들은 이미 올해 두 차례(성과급 미지급 문제와 한미FTA

반대) 파업을 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정몽구 재판을 앞두고 또 파업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 성과급 미지급 문제로 파업을 조직한 박유기 전 위원장과 집행부 26명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했고, 한미FTA 반대 파업을 조직한 현 이상욱 위원장과 집행부 15명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상반기 투쟁이 이번 임단협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점에서 예정된 파업을 강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보다는 파업 유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부족했던 점, 이런 기회에 비정규직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는 게 더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

최영준

'이주노동자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잘못된가

지난 9월 13일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다함께' 동부지역사회포럼에서 일부 동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고마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3D업종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쓸모 없는 존재"라는 거짓에 맞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3D업종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며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더구나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면 3D업종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물론 3D업종 중소기업들이 주로 낮은 임금에 경쟁력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 곧 경영 위기로 연결될 것처럼 엄살떠는 것은 사장들의 논리다. 이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3D업종 중소기업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 그 자체를 지지할 수 없게 된다.

대체로 아무리 열악한 중소기업이라 해도 노조 건설과 임금 인상에 따라 바로 위기에 빠지지는 않는다. 시장 상황, 경영 전략, 수출과 내수 시장 개척 여부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1987년 이후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비교적 나아졌으나, 여전히 3D업종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전태일 시대'를 살고 있다.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열악한 처지를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현정

■ 감옥에서 온 편지

56호 〈맞붙〉에서 이명박을 "반동적 시장주의자"라고 한 기사는, 모든 주류 언론이 이명박 신화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을 때 이명박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폭로한 것이라 시원했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상범의 배신과 민주노동당 노조 기사는 모르고 있던 소식이라 쓸쓸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철학과 관점이 부재하면 얼마나 쉽게 원칙으로부터

일탈하게 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편안한 글이라 두서가 없었습니다.

이곳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랜드 동지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연대가 절실합니다. 〈맞붙〉이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그럼 건강하십시오.

2007년 9월 9일 서울구치소에서
최기영 드림('일심회' 사건으로 복역 중인
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저와 '다함께'의 첫 인연은 지난해 여름 '전쟁과 혁명의 시대' 포럼이었습니다. 그 이후 비교적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맑스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습의 틀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천하고 토론하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 애쓰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감동했고,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특정 사안에서는 '다함께'의 시각에 동의하지 못하고 배움의 부족을 탓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통분모를 찾아

서 움직여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다함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은분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합니다.

뉴코아·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동지 여러분의 힘찬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07년 9월 9일 영등포구치소에서
안병문 드림

(안병문 동지는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적극 연대하다가 7월 27일
연행·구속돼 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첼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앞 길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전지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의 효과로 입은 손실을 추석 대목 때 만회하려던 박성수의 기대는 깨졌다. 홈에버 상암점 경영지원팀장은 “작년 추석과 비교해 매출이 40퍼센트 가량 줄었다”(〈아시아경제신문〉)고 한탄했다. 경찰이 추석 연휴 때 가족과 함께 있던 이랜드일반노조 간부들을 문을 부수고까지 잡아간 것도 초조함의 반영으로 보인다.

추석만 지나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던 박성수의 헛된 기대도 깨졌다. 추석이 지나고 열린 결의대회 때 참석한 노동자들의 수는 추석 전에 열린 총회 때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랜드 노동자 가족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뉴코아 노동자들은 10월 1일부터 서울 지방노동청 점거 농성도 시작했다. 물론 노무현 정부는 10월 2일 정상회담으로 눈이 쏠린 틈을 타 또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박성수는 코너로 몰리고 있다. 최근 이랜드 매장 매각 소식이 돌기 시작했고, 박성수가 뉴코아 강남점 매각 조건으로 CJ한테서 1천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다는 말도 있다.

여론도 여전히 노동자들 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박성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랜드 사측이 낸 ‘박성수 비난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려야 될 내용”이라며 기각했다.

최근 서울대, 이화여대, 고려대, 성공회대 등에서 진행된 뉴코아·이랜드 투쟁 지지 서명·모금 캠페인도 폭발적 반응 속에 성공을 거두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박성수는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노조에게 양보했을 때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신과 다른 기업주들에게 끼칠 손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양보를 거부해서 생길 손실이 양보해서 생길 손실보다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해



9월 30일 뉴코아 파업 1백 일 문화제에 참여한 5백여 명의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지면 박성수도 계속 버티기 힘들 것이다.

박성수의 충실한 ‘용역강패’ 노릇을 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도 난처한 처지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불길기 계속 타오르면서 다른 곳으로 불씨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는 비정규직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자는 방안을 통과시켰고, 울산대병원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고 일주일간 파업해 25명의 정규직화를 얻어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1백 일을 넘어서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파업의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다.

연대 파업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복원된 뉴코아·이랜드 공동 투쟁을 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투쟁을 일시 중단하고라도 협상에 집중하려 해서 공동 투쟁이 깨질 뻔했던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경험을 통해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보 교섭을 추구하다간 뒤통수만 맞게 될 뿐이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

9월 16일 홈에버 면목점 3차 점거와 침탈도 우리 편의 과제를 보여 줬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3차 점거의 일시적 성공은 노동자들의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줬지만, 순식간에 3천여 명의 경찰이 집결해 3시간만에 침탈한 것은 강력한 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증명했다.

당시 연대하다가 연행된 한 한총련 학생은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모아서 연대하러 갔다면 … 그렇게 원통하게 조합원들이 끌려나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했다.

누구보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직 노동자들이 빠져리게 이 점을 공감해야 한다. 지금 노무현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랜드 문제에 전국적인 힘을 집중해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의 대응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에서 총북, 전북 등에서 지역 연대 파업의 필요성이 조금씩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다. 총북은 이미 하이닉스 매그나칩 문제로 지역 연대 파업을 건설한 경험도 있다. 7개월간 싸워 온 창원대 청소 노동자들도 최근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연대 집회 예고 후 곧바로 해고 철회를 얻어낸 바 있다.

이 같은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 모색이 실질적 행동으로 연결되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돼 전국적 행동으로 건설될 때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승리는 성큼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굳건한 투쟁 대오를 유지하면서 끈기있게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건설·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맑스주의 포럼

강원대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일시 : 10월 10일(수) 6시 30분
장소 : 생활도서관(석재 신소재센터 5층)
문의 : 010-9292-5963

북부대학통합포럼

여성 해방은 가능한가?

연사 : 정진희(‘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10월 11일(목) 6시 30분
장소 : 고려대
문의 : 016-9353-5619

단국대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연사 : 김은영(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가)
일시 : 10월 11일(목) 6시 30분
문의 : 010-4540-9525

한국의대·경희대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

연사 : 정병호(‘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10월 11일(목) 6시 30분
장소 :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210호
문의 : 010-4670-1392

건국대

세계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연사 : 이정규(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10월 11일(목) 6시 30분
장소 : 상허관 317호
문의 : 011-1731-2177

성공회대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

일시 : 10월 11일(목) 6시 30분
문의 : 011-9875-4790

지역 사회포럼

서울 남부

버마에 봄은 오는가?
- 버마 민중항쟁 배경과 전망

연사 : 마웅제(버마인 활동가)
일시 : 10월 9일(화) 오후 8시
장소 : 방배1동 동사무소 3층 강당 (방배역 3번 출구)
참가비 : 1천 원
문의 : 010-2401-1987

서울 동부

세계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연사 : 이정규(경상대 경제학과 강사,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10월 16일(화) 저녁 7시 30분
장소 : 여성능력개발원 3층 회의실 (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9-9731-7299

서울 중부

버마 민주화의 어제와 오늘

- 버마인 활동가에게 듣는다

연사 : 조모아(버마 민주민족동맹(NLD) 한국지부 집행위원)
일시 : 10월 11일(목) 오후 8시
문의 : 019-647-3309

짧은 투쟁 소식들

자이툰 연대 철군 촉구 기자회견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가 철군 계획 제출을 거듭 연기하는 것이 파병을 연장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패배하고 있는 부시의 패권을 ‘재건’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자이툰 부대를 포함한 모든 해외 파병 한국군 철수를 촉구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 출범

지난 9월 20일 “입시 없는 세상, 학벌 없는 사회”를 목표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가 출범했다. 홍세화 씨가 대표를 맡았고, 11월 24일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모임은 지난 9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이 “평양으로 가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가족모임은 또 지난 14일 석방된 이시우 씨를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뉴코아노조 ‘파업 100일차 투쟁문화제’

5백여 명이 모인 이날 문화제에서 장석주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강력하게 유지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양 노조의 공동 투쟁을 거듭 강조했다.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도 강력한 연대 투쟁 의지를 밝혔다. 추석이 지나고 파업한 지 1백 일이 넘었지만, 조합원들의 여전한 활기와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KTX 노동자들을 배제한 협의체 구성은 잘못이다

지난 9월 28일 노동부 장관 이상수, 철도공사 사장 이철,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철도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노·사·공의 대표 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외주화와 직접 고용의 타당성을 공동 조사하고 다수의견에 따라 KTX 비정규직 문제를 결론짓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많은 언론이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으로 간주돼 온 KTX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결단 번지르르 할 뿐 그동안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속 빈 강정이다. 이번에 노동부와 철도공사가 합의를 강요한 ‘외주업체로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자들이 거부해 온 안이다. 노동자들은 외주업체가 아닌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싸워 왔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다행히 이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이 동의한 협의체 구성도 기대할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조와 사측이 각각 1명씩 파견하고 공익위원 2명이 참여해 다수결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공익위원 2명을 노동부 장관이 지명하기로 한 것이다. 비정규직 약법 통과에 앞장 서 온 이상수가 지명한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 편에 설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TX 노동자들은 “공익위원



KTX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중재’가 아니라 ‘연대 투쟁’이다

선정에 노사 동수의 추천권을 갖거나 노동부 추천인사 기피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저히 배제된 점이다. 노동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번 “합의 내용이 정리하고 철회 및 철도공사 직접 고용 요구가 관철된 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합의 의제로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협의체의 어떤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도노조·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합의를 받아들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잘못된 합의서의 폐기를 공개 선언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화물연대와 함께 10월 말쯤에 공동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투쟁을 확대해 철도공사를 굴복시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이런 합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KTX·이랜드·코스콤 등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전국적 연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옳다.

정종남

코스콤비정규직지부 투쟁의 갈 길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과 사측의 혹독한 폭력 탄압 속에 파업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이라는 이랜드 투쟁의 모범을 따라 사무금융연맹과 증권업종노조는 코스콤 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연대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 간부들은 구속 결단식까지 했다.

이런 투쟁과 연대 덕분에 <조선일보>는 “확성기 소음 속에 묻힌 거래소의 모습 속에, 금융허브 프로젝트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코스콤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우리가 내민 손을 외면하지 말고 뜨거운 동지애로 잡아”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를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콤비정규직지부와 사무금융연맹이 코스콤 정규직 노조 지도부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정당하다.

하지만 ‘코스콤 퇴출 운동’(사측뿐 아니라 정규직 노조에게도 압력을 넣겠다는 문제의식)이라는 투쟁 전술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 전술은 의도치 않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비정규직 차별이 왜 정규직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득하고 입증하며 연대를 호소하는게 나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투쟁의 지지자로 만들면 정규직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진정한 압력이 될 것이고 또 승리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오정숙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에 맞선 투쟁

10월 1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무기계약직화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언제든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노예문서다. 더구나 무기계약직화에서도 제외된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돼도 학교의 통폐합, 공무원의 충원, 학생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의 상황에서 해고가 가능하다. 결국 인사·예산상의 이유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노동자들에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를 거부하자는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했

으며, 인사관리 지침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무기계약 취업 규칙과 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거부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이런 저항으로 서울·경기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취업 규칙상 독소 조항 삭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압력과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다. 그들의 머뭇거림을 굳건한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달려 있다. 무기계약 전환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과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문제를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 싸워야 한다.

한나리(비정규직 교사)

더 커진 고려대 출교 철회 여론

2학기 개강 후 고려대 출교반대대책위의 캠페인은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일주일 만에 1천 명이 넘는 학생들과 30명의 교수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한편 출교에 찬성하는 총학생회는 출교무효소송 판결을 앞두고 출교 찬성을 선동하기 위해 정책 투표를 발의했다.

그러나 “출교자들이여, 군대로 갑시

다!”와 같은 총학생회장의 비상식적인 선동은 많은 학생들의 반감을 샀다. 한 사회과학 동아리는 수천 장의 ‘출교 반대-총학생회 규탄’ 리플렛을 학내 강의실 모든 자리에 부착하기도 했다.

결국 투표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유권자 명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정책 투표는 무산됐다. 반면 이를 계기로 출교 반대 여론은 더욱

광범해졌다. 또한 출교 반대를 위해 학내 좌파들이 단결하는 계기가 됐다.

9월 20일 예정됐던 출교무효확인소송 판결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재판장)이라는 이유로 10월 4일로 연기됐다. 이것은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이 대학 민주화를 위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큰 투쟁임을 말해 준다.

출교반대대책위는 투쟁 승리를 위해 10월 2일 대중집회를 비롯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결의하고 있다.

강영만(고려대 출교생)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전쟁광들

부시 정부와 네오콘들은 증파 이후 이라크 상황이 나아졌다고 우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란이 이라크 상황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시 정부는 주로 이란 ‘핵 개발’ 문제를 부각시켜 이란을 압박해 왔다. 최근 부시 정부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대(對)이란 경제 제재안에도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수색 등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담겨 있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인사들은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군사 공격도 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런 조치들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투표는 11월로 연기된 상태다. 최근 〈뉴욕커〉의 저명한 탐사전문 기자 세이모어 허쉬는 “부시와 보좌관들은 이란 핵이 즉각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미국 대중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거짓말

이란 상황에서 부시 정부는 ‘이란의 이라크 저항세력 지원설’을 들고 나왔다. 허쉬는 익명의 고위 관료를 인용해 체니가 이란 공격을 “이라크 내 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지칭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라크 사령관 데이비드 페트라우스는 9월 중순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이 시아파 민병대들을 헤즈볼라 형태의 군대로 변화시켜 이라크 국가와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을 상대로 대리전을 치르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하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이란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근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는 미 공군이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고도의 기밀 전략기획팀을 발족하고, 아랍 일부 국가의 공군을 훈련시켜 대(對)이란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육군이 이라크-이란 국경에 새로 군기지를 건설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란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상황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정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이라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부시 정부다. 허쉬가 지적했듯이 부시는 “이란이 이라크 전쟁에서 지정학적 승리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깨달음” 때문에 이란을 위협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위협이 반드시 전쟁으로 발전하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위협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반전 운동은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용욱

9월 28일 미군 공습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오열하고 있다
- 이런 만행을 돕는 파병 연장은 중단돼야 한다

김용욱

이라크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저지르다 이제 이란 확전까지 노리는 부시 옆에서 노무현 정부는 주판알을 열심히 튀기며 파병을 연장할 궁리만 하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임무 종결계획서 국회 제출 시기를 10월 중순으로 다시 한 번 연기했고, 며칠 전에는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을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평가단은 국무총리실, 국방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인사 등 1백퍼센트 정부측 인사로 구성될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인원이 파견되는 이유는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다. 일부는 아예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 조성”으로 자이툰의 임무를 집중시키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이용해 돈을 벌자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기준을 따르든 정부의 ‘성과평가단’은 파병 연장을 권할 것이고 이 의견이 임무종결계획서에 반영되면 국방부는 곧

바로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파병 연장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에 통과 과정이 순조롭지는 못할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 연장 반대 운동에 이미 돌입했다. 오는 10월 27일에는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 공동 반전행동’이 열릴 것이다.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행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결집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라크에서 계속되는 야만적 학살

지난 9월 중순에 보안용역업체 ‘블랙워터’ 경호원들이 이라크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발포해 10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부시 정부는 부족한 지상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안용역업체로부터 민간 용병들을 고용해 왔고 이들은 ‘요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라크인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사용했다.

블랙워터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보안용역업체다. 이 회사는 2005년에 “살인은 사실 재미있는 일”이라는 내용의 내부 회람을 발송한 바 있다.

사실 이라크 주둔 미군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학살을 해 왔고 최근 부시 정부의 증파 정책은 학살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였다.

부시 정부는 병사들이 “위험을 느끼기만 하면” 무차별 발포할 수 있도록 교전수칙을 바꾸고, ‘저항세력’ 소탕 성과를 내놓으라고 각 부대에 압력을 넣었다.

최근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재판에서 미군 사병들은 상관이 이라크인

을 죽인 뒤 시체에 가짜 증거를 심으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병사는 “[상관] 미군 저격수 은신처를 우연히 발견한 이라크인을 쏘라고 나에게 명령했다 … 그 이라크인은 무장하지 않았고 손을 위로 들어 저항의사가 없음을 밝혔었다” 하고 울면서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ORB는 이라크 전역

의 1천4백61개 가구를 심층 면접 조사한 후 미군의 이라크 침략으로 1백20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저명한 의학 잡지 〈랜싯〉이 집계한 65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다.

학살당하지 않은 ‘운 좋은’ 이라크인들은 죽음보다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유엔은 4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난민이 됐다고 폭로했다. 이라크 적신월사는 50만 명이던 국내 난민 수가 올 2월 증파 이후 6개월 동안 1백10만 명으로 늘었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이라크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다.

같은 기간에 재판 없이 구금중인 이라크인들의 수도 1만 6천 명에서 2만 4천5백 명으로 50퍼센트나 늘었다. 그 중 8백 명은 11~17세의 청소년들이다.

당연히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미군 점령과 특히 최근 증파 정책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미국 ABC, 영국 BBC, 일본 NHK 등의 여론 조사를 보면 이라크인 10명 중 6명이 증파 이후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